

마스크 폭리 논란에 정부·지자체 '강경 대응'

60매에 23만원 넘게 팔기도...지역·벌금 등 엄정조치 하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크게 늘자 이를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업자들이 등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미세면지 마스크 대형 60매를 23만8800원에 판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 마스크 1매당 약 400원꼴로 사실상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가격을 올렸다", "말도 안되는 가격", "도대체 얼마를 이득으로 남기려 하느냐" 등 글을 남겼다.

기존 구매자에게 "품질"을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높여 판매하는 양제 판매자까지 등장하자 '마스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팔 지경이다. 아베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G마켓에서 팔린 마스크는 지난주 대비 4380% 폭증했다.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 A씨(43)도 최근 거래처에 제공해야 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스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업체가 많다"며 "장

당 500원 했는데 1000원 달라고 하더라. 거래처에선 마스크를 달라고 아우성인데 공급가가 비싸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나올 때마다 싸늘이 하는 중국인들의 사재기와 국내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과 해외유통으로 현재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A씨는 "마스크가 모두 중국으로 빠져나가 국내에서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할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답합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1월2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구장에 들어서고 있다.

살인·난민에도 버틴 '무사증 18년'...코로나에 '무릎'

◇제주성당살인사건·예멘 난민 사태에도 폐지론 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 현재 제주에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만명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에 오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도 덩달아 늘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2014년 33명, 2015년 39명, 2016년 64명, 2017년 64명, 2018년 63명 등 2배 가까이 늘었다.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란 이이다.

무더기 난민 신청을 한 것이다. 이처럼 많은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화두가 됐고 자연스럽게 다시 무사증 폐지론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이때만해도 무사증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 예멘인들이 범죄 등 제주에 큰 피해를 주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관광산업이 추가 되는 지역경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같은해 국회에서 발의된 무사증 폐지 법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무사증 제도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란 이이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전세계를 들쭉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제주도는 결국 무사증 일시 중단을 선택해야 했다.

2002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입...외국관광객 증가 기여

2016년 정당살인사건·2018년 예멘 난민 등 폐지론 꾸준히

년부터 관광객 유치에 테러 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사증이 제주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은 약 79만 7300명으로 전체의 약 99%에 이른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 100만 명 돌파 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주춤하기는 했지만 지난해 다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을 향한 비난과 공포로 이어졌다. 무사증 폐지에 불을 붙인 건 2016년 이른바 제주 정당 살인사건이다.

중국인 관광객 쉼터(50)가 제주에 한 식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명확한 동기도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라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가 신설됐고 무사증 폐지론이 공론화됐다.

2018년에는 예멘 난민 사태로 다시 한번 무사증 제도 개선이 부각됐다.

약 500명의 예멘인들이 자국 내전을 피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와

병원서 행패부려 벌금형 받고 "찢러죽인다" 또 난동부린 60대

광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6개월 실형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벌금형을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병원을 찾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찢러죽인다"며 협박한 60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염기창)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오후 5시 5분쯤 전남 완도군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서 119에 의해 이송돼 진료를 받던 중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간호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를 제지하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에게 욕설을 했고, '불을 질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한달 반만인 지난해 6월16일 오후 8시50분쯤에 또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흉기를 휘둘러 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했다.

또 9월16일 오후 2시15분쯤에도 이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출중한 경찰에게 "쳐 넣어 XX야", "또 징역 간다 XX야"라고 소리치르는 한편, 경찰이 체포서를 작성하자 "찢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을 협박했다.

결국 A씨는 2번째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